

“전북자치도, 내년 지방채 2000억 발행”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 “올해 1030억원 대비 약 2배 늘려 잡아...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 자료 반영되길”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 30여명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을 검토해 내일 오후 1시 30분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 심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받았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장시근 외 4인) 소속 15개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전북자치도의 예산이 전년 대비 7,026억원 7.7% 증액된 9조 8,077억원(기금 제외)으로 얼마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2025년 편성 예산안은 2024년의 2.6% 증액된 예산보다 2025년에는 5.1% 높게 편성됐는데, 단순히 수치를 보고 확장 예산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지방채가 2,000억원이나 발행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채 발행은 2024년의 1,030억원에 비해 늘어난 액수이고, 이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지역 개발기금 내부 거래 차입으로 전북자치도의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에서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시일이 촉박하여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예산안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반회계예산에서 보조 사업 예산 6조1,809억원으로 70.7%에 해당하며 자체 사업예산이 2조 5,610억원으로 29.3%로 구성돼 도 자체 예산보다 중앙정부의 높은 예산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 293개 신규 사업 예산은 2,264억원이며, 자체 사업 622억원, 보조 사업에 1,642억원이 편성됐다고도 했다.

그리고 공공질서 안전, 환경,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 사업 비율이 90% 이상이고, 과학기술, 공공행정, 교육 분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15개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자치도 2025년 예산안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야는 자체 사업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2025년 예산 편성 시 세수 결손으로 도에서 757억 원이 줄어든다”며, “이런 전북자치도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제 결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설명하기를 경기가 둔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부진해서 생기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원인은 딱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는 바로 부자 감세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족한 예산과 한정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예산 심의 관련해서 익산참여연대의 황인철 시민사업부장은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평균 예산 수정률이 전체 예산 대비 0.26%로 전국에서 가장 소극적인 예산 권한

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서울·경기·제주도의회는 예결위윈회에서 수정 예산안을 단체장 동의를 얻어 삭감 예산 대부분을 사업예산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비해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12년간 예산 심의 삭감 예산을 잔액에 예비비 또는 유보금으로 편성하면서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의회는 예산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결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예산안 심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경기도의회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그리고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의원 발의로 제정된 생활안정 조례 중 예산 반영이 필요한 37개 조례에서 13개 조례는 75

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부가 24개 조례에 대해서는 관련된 의사를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입법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북자치도의회는 집행부를 향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자치도청의 2025년 예산에 대한 검토는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삼근활동가 교육 등을 통해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검토자료가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북자치도에 산재한 1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기 외 5인), 익산 참여연대(대표 장시근), 전북환경운동연합(유영진 외 3명), 전북희망나눔재단(대표 최병선), 전북 YWCA(회장 이현순) 등이다. /이만호 기자

“尹 탄핵의 불씨, 전국으로 확산”

조국혁신당, 22일 전주 송남문광장서 ‘탄핵다방’ 오픈 조국 대표 “도민께尹정권 탄핵 필요성 직접 알릴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22일 오후 5시 전주 송남문광장에서 ‘탄핵다방 전주점’을 오픈한다. 탄핵다방은 조국혁신당이 “국민께 직접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전국 순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탄핵의 불씨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전주 탄핵다방은 11월 22일 대구를 시작으로 목포, 여의도에 이어 전주가 네 번째로 열리며, 조국 대표는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음료를 나누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통해 탄핵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과 법안도 알리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 4법(△공소장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처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답페이크 차관 6법(서지현법), 지역 살리기 5법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설명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장은 “지난 10월 26일 조국혁신당은 원내 정당 최초로 ‘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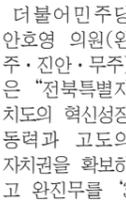


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선언대회’를 단독으로 개최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탄핵다방 전주점 오픈이 탄핵의 불씨를 들불처럼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탄핵다방 전주점 오픈에 앞서 전북대 사회대학 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은 오후 1시 30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전주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완주·진안·무주 3대 특별시 조성”

민주 안호영 의원,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 동력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완주, 무주, 진안 3대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지만,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의 구체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 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라산

업을 육성하며,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특례 등 총 34개의 특례를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특례,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 대비한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북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드렸고, 국무조정실·전북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법안 발의 과정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한 지난 총선에서 ‘완주, 무주, 진안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으며, “개정안에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반영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원이 공동발의해,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이만호 기자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특별자치도 배제조항 잘못됐다”

〈전북·강원〉

민주 김윤덕 의원 “지구 수정과 함께 양 자치도민에 사과하라”

배현진 의원의 절도입법 주장에 “결함 고쳐... 청부입법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을 제출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제외하도록 법안을 만든 배현진 의원이 175만 전북특별자치도민, 152만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단순히 법안 기술적 실수가 아닌 노골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이는 특별자치도민을 차별한 내용의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022년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역시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불구하고, 배현진 의원은 그 다음해 2023년 3월 13일 특별자치도들만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지역 차별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전북과

강원특별자치도가 배제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 힘 측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현진 의원이 22대 국회에 들어와 2024년 6월 14일 또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두 번 연속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발의한다는 것은 배현진 의원 개인을 넘어 이제 국민의 힘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현진 의원안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전북과 강원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게 되며 지구 내 관광산업 협력 방안, 관광 상품, 마케팅, 홍보, 관광객 유치 확대, 세부 재원 조달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



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 둘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배 의원이 이러한 법을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 하라며, 국민의 힘에게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배현진 의원은 지난 21대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10여 건의 청부입법을 마치 자신이 법안을 성안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다수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청부입법 제조기’라고 말하며, 배현진 의원이 문제 제기한 문화유산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청부입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문체부에서는 연초부터 해당 법을 중요 입법과제로 놓고 법안을 준비해오고 있었다며, 문화유산진흥 기본법은 2024년 3월 12일 김윤덕 의원실이 법제실과 상의해 만들어 2024년 4월 3일 법제실 공식적

결재라인을 통해 입안지원시스템으로 송부받은 것”며 “법제실 원작성 유사 법안인위가 들어오면 입안지원시스템으로 공식송부가 되지 않고 유사 법안 인위가 있다고 설명하고 메일로 송부 가 되는 만큼 민과 법제실에서 유사 법안 인입된다고 설명하고 메일로 보냈다면, 일면서도 발의한 배현진 의원이 입법 절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같은 상임위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방해하지 말고 정부가 가져다주는 청부입법이나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그대로 빼개 발의했다며, “절도입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문장 하나, 단어 몇 개만 수정을 해서 법안을 그대로 옮겼다”며 “김 사무총장은 법안을 철회하면 표절을 인정하는 꼴이라 철회할 수 없다는 답답할 수 없는 해명도 내놨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필요하다면 김 사무총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립미술관장 갑질 행위, 문책으로 결론... 갑질은 사실”

박용근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미진감사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미진감사에서 작년 도립미술관장에 대한 갑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두고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 앞서 관장의 처분 요구서를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감사위원회가 도립미술관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번호사 3명에게 지문을 의뢰한 결과, 3명 모두 갑질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공개하며, 도립미술관장의 갑질 행위가 인정되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갑질 행위 외에도



수장고 업무 분장의 부적절, 수집작품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의 부적절 등 총 3건의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가 경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과정에서 정체가 아닌 문책 수준

의 술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처분이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재감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감사규칙 제19조 3항에 의거하여 재감사를 통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재감사를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